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

3일 0시부터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하기로 내·외국인 구분 없어...입국 1일차 PCR은 유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가족 모임과 방문도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 된다.

또 3일 0시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된다. 대신 입국 후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된다”며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해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방역강화국가 제도를 도입해 해당국 입국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 등을 강제출발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한 입국 전 검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후에는 24시간 내에 PCR 검사를 1회 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7일부터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됐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24시간 내 PCR 검사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BA.1 바이러스에 대해 2가 백신을 4분기(10~12월) 도입한다. 미국 화이자사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2가 백신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 중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되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성인도 접종 가능하

다”고 밝혔다. 국산 백신 1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오는 9월 5일부터 당일·방문접종이 가능해진다. 9월1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오는 9월 9~12일 추석 연휴 기간 방역·의료대책도 논의한다.

정부는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경남, 전남 지역 휴게소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 기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PCR 검사 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 간 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며, 휴게소, 대중교통 내 실내취식도 허용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의 대면면회는 금지 조치는 추석 연휴에도 유지된다.

추석 연휴에도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4900여 개소가 운영된다. 당번약국제도도 운영하며, 인근에 당번약국이 부족한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8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명대로, 누적 확진자는 약 2324만명이다. 전 국민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명절”이라며 “국민들께서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도록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고향)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달라”며 “가급적 방문 전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 되도록 짧게 머물러 달라”고 권고했다.

정승호기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내달 3일부터 폐지, 입국 후 PCR검사 유지 오는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사진은 8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모습.

전남선관위, 추석명절 금품제공 불법행위 특별단속

금품제공 받은 사람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위법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전남선관위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농·수·산림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안내한

다. 특히 내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조합장이나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 또는 선거운동 목적 금품제공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시·군선관위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수원 세 모녀’ 비극 교훈...전남도, 24시간 상담센터 설치

전남도가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교훈 삼아 이러한 비극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복지시스템 전반을 점검·보완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8월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크게 위기정보 접수 접촉면 확대·역량 강화,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확대, 중장기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등을 담았다.

대책에 따라 전남도는 자체 ‘복지위기 상담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시·군 읍·면·동과 연계해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거구에 대해선 우선 지원하고 구제절차

를 보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업무 전문성도 높인다. 직렬 구분 없이 공무원 기초 복지교육을 실시해 모든 공무원을 복지상담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공동체 인력자원을 대상으로도 복지교육을 상시화해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위기가구 집중 발굴 추진단’을 꾸리고 9월부터 2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선 상담, 긴급지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확대로 읍·면·동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마음안심버스, 건강지킴버스 등 ‘전남버스 삼총사’도 본격 운영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여기에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고,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불일치한 사람이 위기신고 접수 시 복지전담 공무원이 추적해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제도 정비 건의를 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